

#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인구센터 안수지 부연구위원, 장채윤 연구원, 권승은 연구원

## 1. 총인구는 감소 추세로 전환

### ▶ 인구 감소 추세 및 요인

- 총인구 감소 추세
  - 우리나라 총인구수는 2020년 5,183.6만 명으로 최고점에 다다른 후, 감소 추세에 접어들
  - 10년 전 추계(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 기준으로는 인구수가 계속 증가하여 2025년 약 5,261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예상보다 가파른 합계출산율 감소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고령층 사망으로 총인구 감소 추세 시기가 더욱 빨리 도래

그림 1 2016년 장래인구추계와 실제 인구 비교: 2010-202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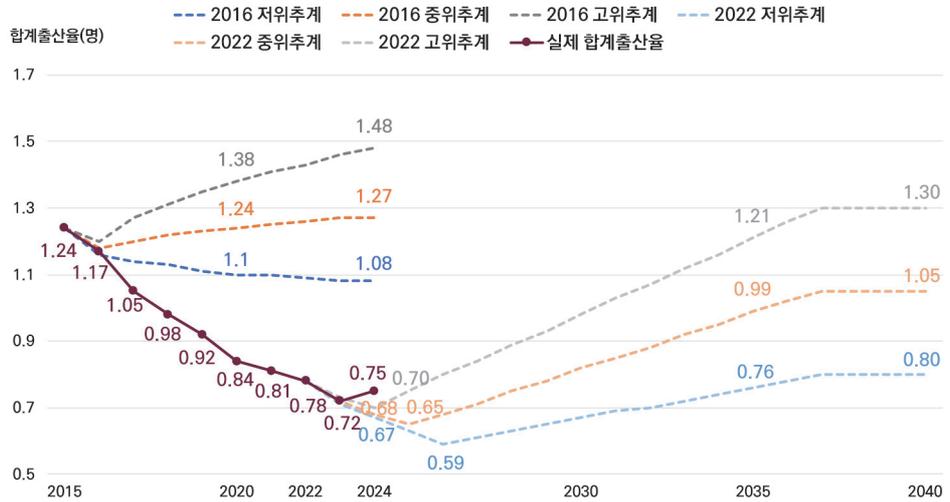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2016),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2025)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합계출산율<sup>1)</sup> 추계와 실제 합계출산율 비교
  - 2016년 인구추계 당시 합계출산율은 반등하여 1.2명대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1.0명 미만으로 떨어졌으며, 2024년 실제 합계출산율(0.75명)은 2016년 고위추계(1.48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
  - 2022년 인구추계는 합계출산율이 2025년 0.65명까지 하락한 후 반등하여 2040년 1.05명까지 회복한 후 유지할 것으로 예측(고위추계 기준 2040년 1.30명까지 상승 예측)

1) 합계출산율: 가임 여성(15-49세)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로, 모든 추계 시나리오보다 0.05~0.08명 높게 관측되었는데, 이러한 추세가 2040년 1.0명대까지 꾸준히 이어질지는 미지수

**그림 2** 합계출산율 예측치와 실제 비교 및 2022 장래인구추계 전망: 2015-2040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5년~2065년」(2016), 「장래인구추계: 2022년~2072년」(2023), 「인구동향조사, 합계출산율」(2025)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급격한 속도가 문제

- 출생아 수는 14년 만에 절반으로 감소
- 2018년부터 합계출산율 0명대 유지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의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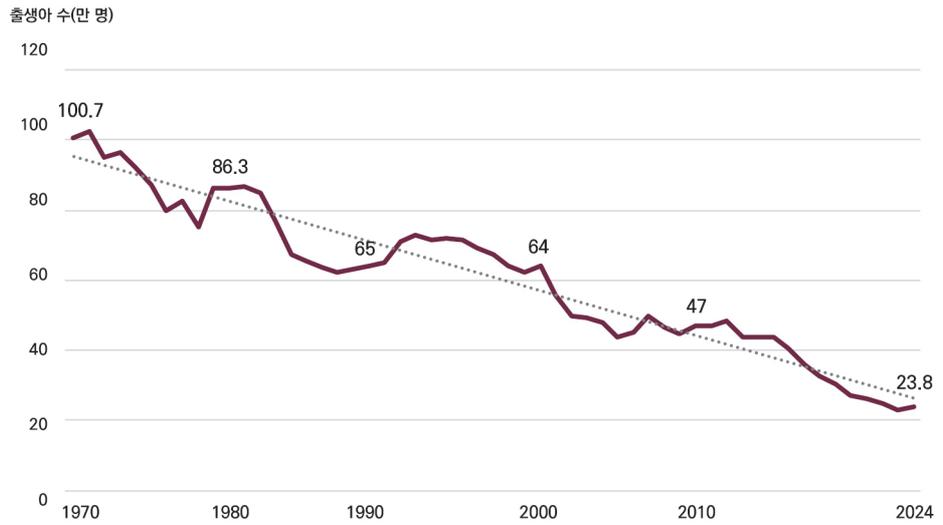
- 출생아 수 감소: 14년간 절반 수준으로 급감
  - 2024년 연간 출생아 수는 약 23.8만 명으로, 1970년 100.7만 명 대비 1/4 수준
  - 2024년 연간 출생아 수는 2010년 47.0만 명 대비 절반 수준, 14년간 출생아 수 절반 감소
- 합계출산율 감소: 0명대 합계출산율의 장기화
  - \* 인구 유지를 위한 합계출산율: 2.1(명)
  - 2000년 이후 1.1-1.2명대를 유지하던 합계출산율은 2018년부터 1.0명 미만으로 추락

**표 1**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4년

구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출생아 수 (만 명)	100.7	86.3	65.0	64.0	47.0	43.8	40.6	35.8	32.7	30.3	27.2	26.1	24.9	23.0	23.8
합계출산율 (명)	4.53	2.82	1.57	1.48	1.23	1.24	1.17	1.05	0.98	0.92	0.84	0.81	0.78	0.72	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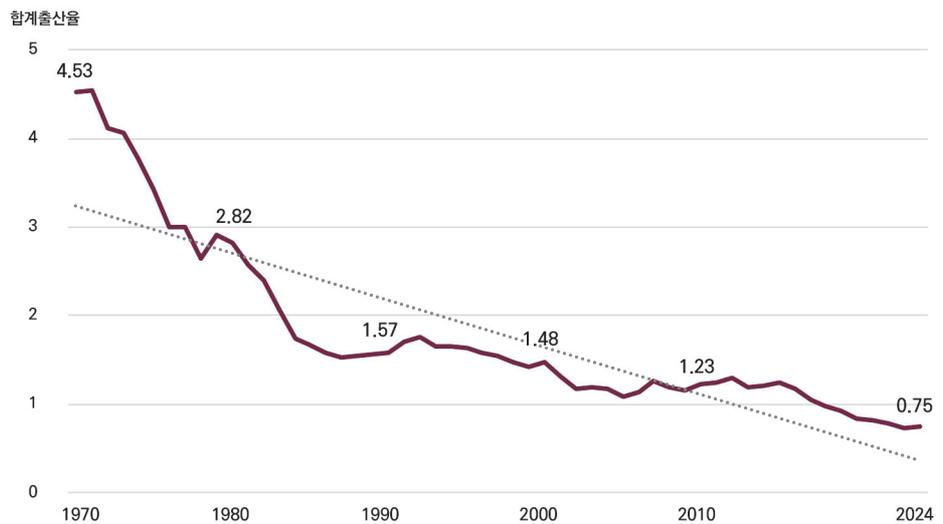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그림 3 출생아 수 추이: 1970-2024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그림 4 합계출산율 추이: 1970-2024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생」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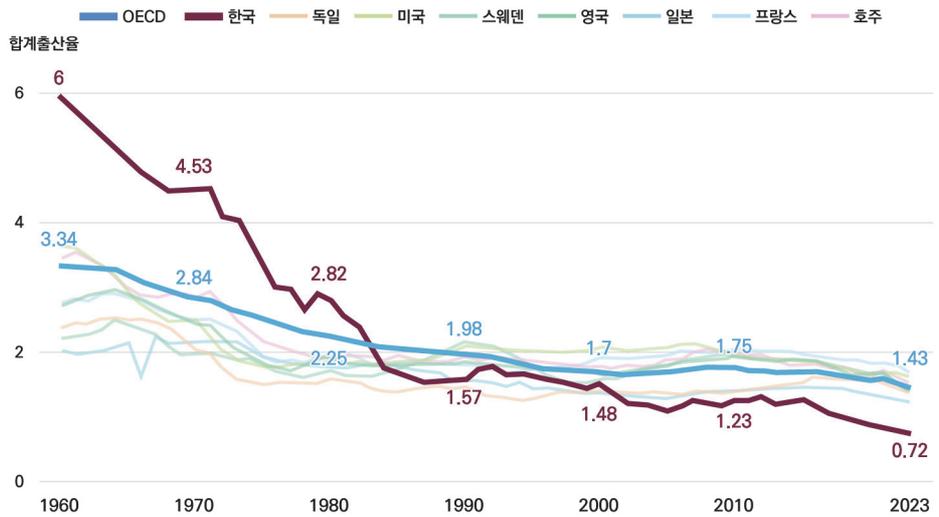
▶ 저출산은 국제적 현상

- OECD 전체적으로 저출산 추세
- 그러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OECD 유일의 0명대

🔍 OECD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비교

- OECD 주요 국가 대비 합계출산율 급락
  - 1970년 기준 한국 합계출산율은 4.53명으로, OECD 평균 2.84명 대비 1.5배 상회
  - 2023년 기준 한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1명 미만이며, OECD 평균 1.43명 대비 1/2 수준밖에 되지 않음

그림 5 OECD 주요 국가 합계출산율 추이: 1960-2023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2. 생애주기의 해체, 가임 인구 붕괴

### 혼인 및 모성 관련 사항

- 혼인율의 지속 감소
  -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sup>2)</sup>은 1980년 기준 10.6건에서 지속 감소하여 2022년 3.7건으로 집계됨
  - 2024년 4.4건으로 급증한 것은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감소하였던 혼인율이 반등한 영향 및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의 결혼 적령기 진입 영향일 가능성이 있음

그림 6 조혼인율 추이: 1980-2024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혼인건수, 조혼인율」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2) 조혼인율: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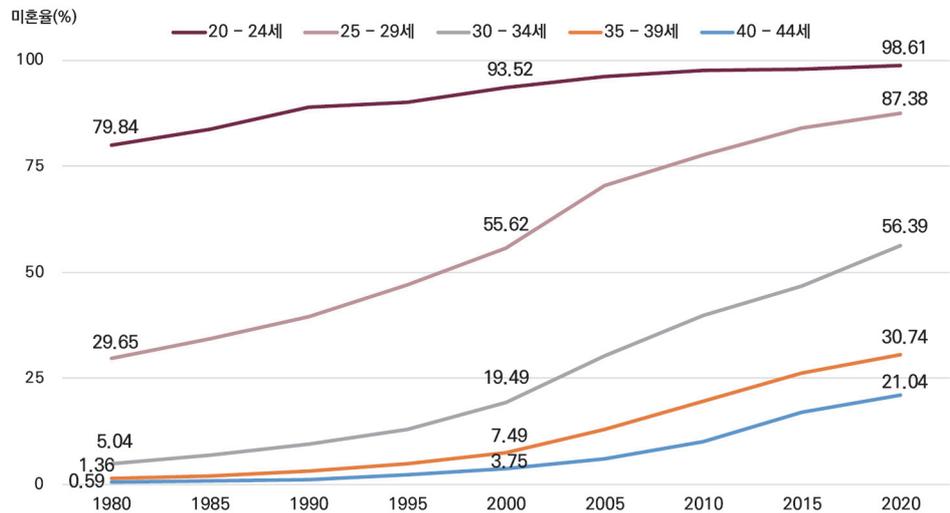
▶ 혼인율의 변화

- 조혼인율 지속 감소
- 전 연령대에 걸친 미혼율의 증가
- 기혼출산 기반의 절대적 약화

• 결혼 유예의 전면화와 미혼 인구의 증가

-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율이 상승, 그 중 25-29세 미혼율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짐
- 2020년 기준 25-29세의 미혼율은 89.38%로 미혼이 일반적인 상태
- 현재 결혼 적령기로 여겨지는 30-34세의 미혼율은 2000년 19.49%에서 2020년 56.39%로 약 3배 가까운 수준으로 증가
- 2020년 기준 35-39세에서도 미혼율은 30% 내외로 나타나, 10명 중 3명은 미혼 상태
- 초혼 및 초산 연령의 지연을 감안하더라도, 모든 가임 연령의 미혼율 증가는 출산율 저하로 이어짐

그림 7 연령별 미혼율 추이: 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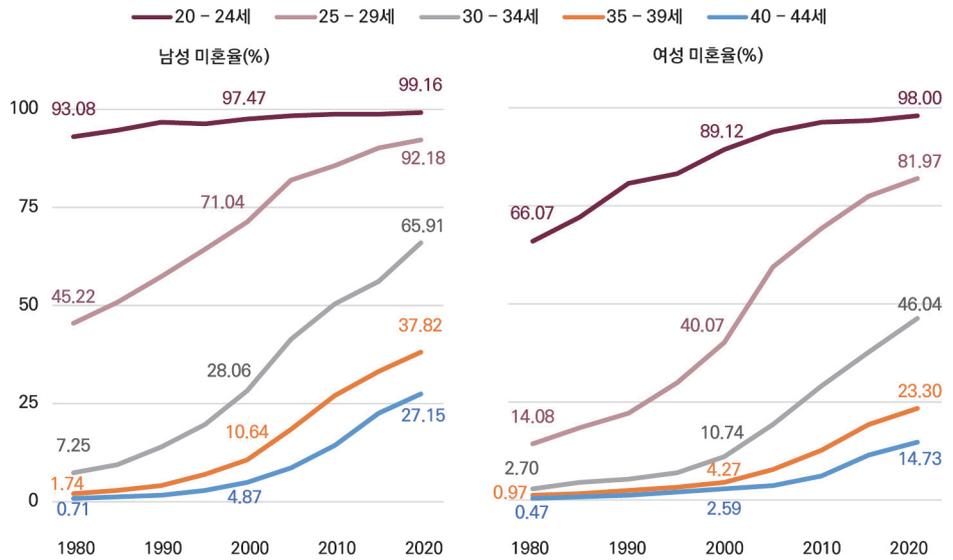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각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성별 미혼율 추이

- 20-44세 모든 연령대에서 미혼율이 증가하는 가운데, 남성의 미혼율은 여성의 미혼율보다 항상 높음. 특히 30-34세의 경우 2020년 기준 남성 미혼율(65.91%)이 여성 미혼율(46.04%)보다 무려 19.87%p 상회<sup>3)</sup>
- 여성은 남성에 비해 미혼율이 낮지만 상승세가 매우 가파르며, 특히 25-29세 여성의 미혼율은 1980년 14.08%에서 2020년 81.97%로 무려 67.89%p 상승

3) 여기에는 1970-2007년까지 이어진 출생성비 불균형(남아 선호)이 결혼성비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조성호. (2024). 한국의 출생성비 불균형과 결혼성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 ISSUE & FOCUS, 449.)

**그림 8** 성별 연령별 미혼율 추이: 1980-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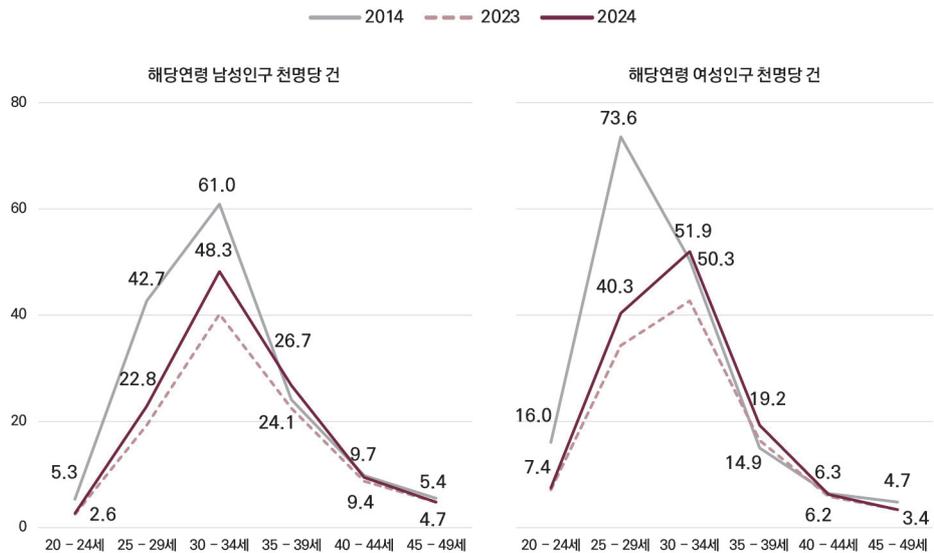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각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연령별 천 명당 혼인건수 추이

- 남성의 경우 10년 전인 2014년과 마찬가지로 2024년 기준 30-34세의 천 명당 혼인건수가 가장 높으나, 그 수치는 감소(2014년 1천명당 61.0건에서 2024년 48.3건으로 감소)
- 여성의 경우 2014년에는 25-29세의 천 명당 혼인건수가 73.6건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2024년에는 그래프가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30-34세의 천 명당 혼인건수가 51.9건으로 가장 높음

**그림 9** 연령별 혼인율(성별): 2014-2024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혼인, 이혼통계」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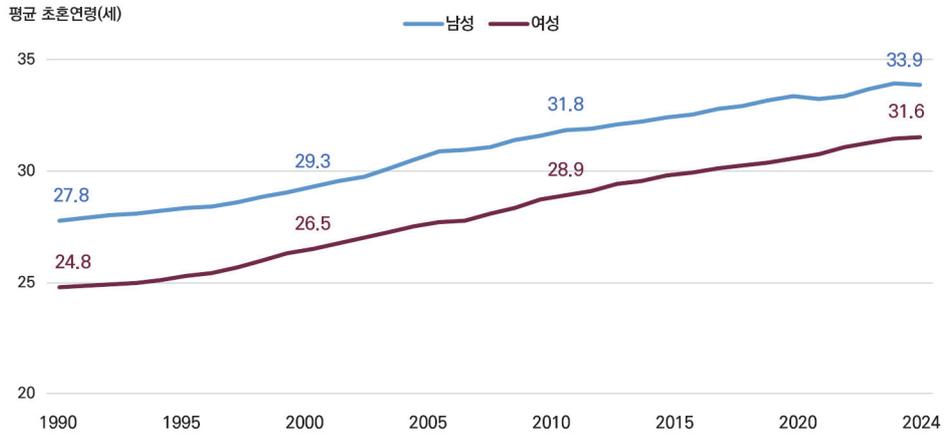
▶ 초혼연령 상승에 따른 초산연령 증가

- 초혼연령 남 33.9세, 여 31.6세
- 이는 단순히 결혼 시기가 늦어지는 데 그치는 문제가 아닌, 출산 가능기간 자체가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
- 이는 자연스럽게 출산율 저하로 이어짐

• 평균 초혼연령의 증가

- 남성 초혼연령은 1990년 평균 27.8세에서 2024년 33.9세로 6.1세 증가
- 여성 초혼연령은 1990년 평균 24.8세에서 2024년 31.6세로 6.8세 증가

그림 10 평균 초혼연령 추이: 1990-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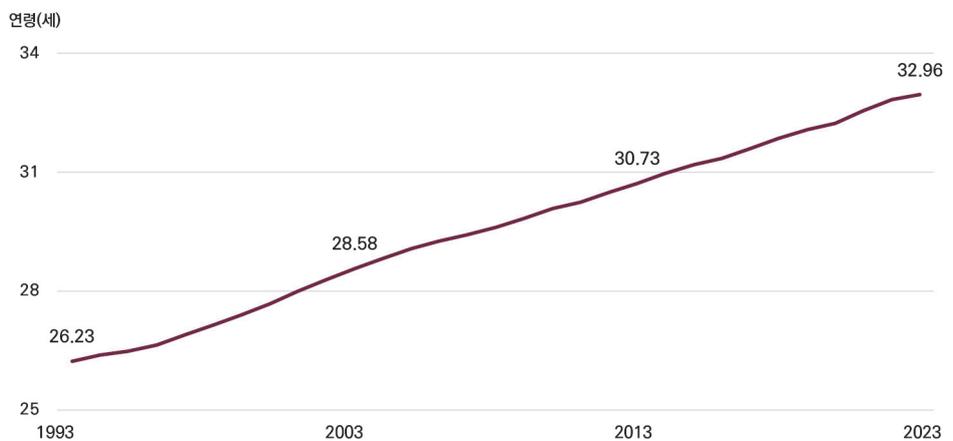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혼인, 시도별 평균초혼연령」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평균 초산연령<sup>4)</sup>의 증가

- 초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평균 초산연령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1993년 기준 초산연령은 약 26세로, 가임기간을 15~49세까지로 보았을 때 출산 가능 기간은 23년이었으나, 2023년 기준 초산연령은 약 33세로 출산가능 기간은 16년 정도로 짧아짐
- 초산이 늦을수록 둘째 출산을 할 의향이 줄어든다<sup>5)</sup>는 점에서 합계출산율에 부정적 영향

그림 11 평균 초산연령 추이: 1993-2023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첫째아 모의 평균 출산 연령」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4) 초산연령: 첫째아를 출산할 당시 모의 평균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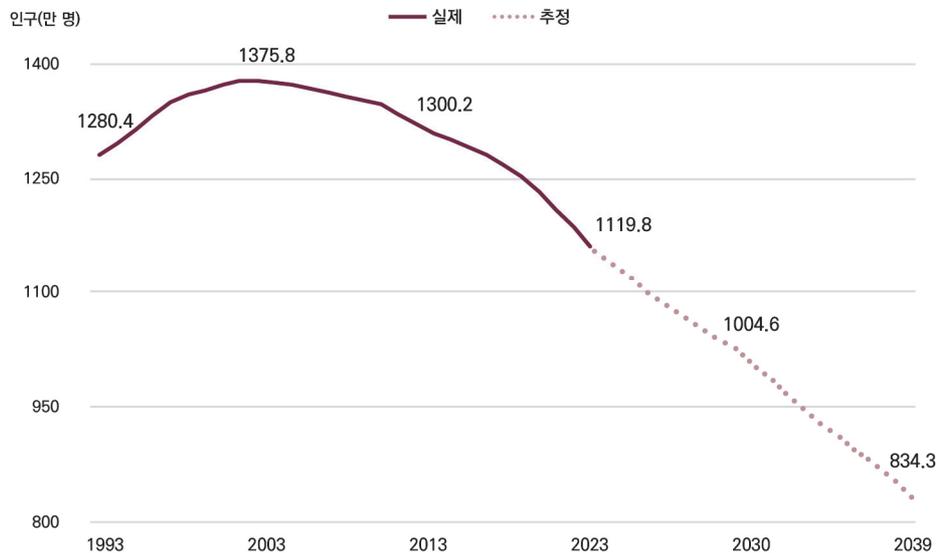
5) Guzzo, K. B., & Hayford, S. (2011). Fertility following an unintended first birth. Demography, 48, 1493-1516., 우해봉, & 이지혜. (2019). 출산 의도를 반영한 출산 패턴과 영향 요인 분석. 통계연구, 24(4), 1-27.

▶ 여기에 더하여, 가임여성 인구의 급락이 예상됨

- 2003년 정점 이후 급격히 하락 중으로, 2039년에는 현재의 75% 수준으로 떨어짐
- 인구재생산 기반의 약화

- 가임여성(15-49세 여성) 인구수의 지속적인 감소 예상
  - 주민등록인구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 가임여성 인구수는 2003년 1,376만 명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2023년에는 1,200만 명을 기록, 사망, 이탈 및 유입이 없다고 가정 시 16년 후인 2039년에는 지금의 약 75% 수준인 약 834만 명 이하 수준으로 감소
  - 모수로서의 가임여성 인구 지속 감소로, 합계출산율 0.76명(2023년 기준)을 유지할 경우 출생아 수는 2024년 23.8만 명에서 2039년 약 18만 명 수준으로 지속 감소가 전망되며,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3.4만 명으로 추정되어 여전히 20만 명대 초반을 넘지 못할 것으로 예상<sup>6)</sup>

그림 12 가임여성 인구수 추이: 1993-2039년



출처: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현황, 시군구/성/연령(1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주: 2024-2039년은 추정치로, 사망 및 이탈 0명 가정 하 2023년 기준 0-14세 여성 인구수 단순 반영

▶ 혼외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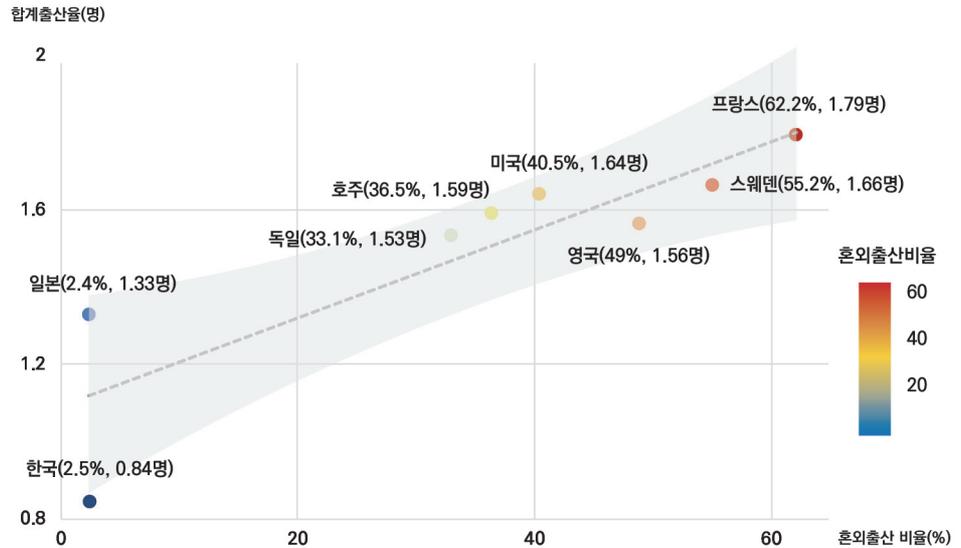
- 혼외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
- 낮은 혼외출산율은 전통적 가족·성 인식의 결과일 가능성

- OECD 국가 대비 극도로 낮은 혼외출산율
  - 2020년 기준 우리나라 혼외출산율은 2.5%로, 2.4%인 일본과 함께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이며, OECD 국가의 혼외출산율과 합계출산율은 양의 상관관계에 있음
  - 우리나라의 낮은 혼외출산율은 내재적으로 깊이 뿌리박힌 전통적 가족·성 인식·결혼관에서 비롯된 결과임<sup>7)</sup>과 동시에, 혼외출산에 대한 법적·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점도 외부 요인으로 작용

6) 합계출산율 0.763(2023년 합계출산율)을 가정한 출생아수 추정치는 2023년 기준 가임여성 5세 연령구간별 출산율이 2039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한 추정값이며, 합계출산율 1.0을 가정한 시나리오의 경우 가임여성 5세 연령구간별 출산율이 모든 구간에서 동일하게 1.3배 (=1.0/0.763) 증가한다고 가정하여 단순 계산한 추정값임에 유의

7) Axinn, W. G., & Thornton, A. (1993). Mothers, Children, and Cohabitation: The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Attitudes and Behavior.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2), 233-246

그림 13 OECD 주요 국가의 혼외출산율-합계출산율 비교: 2020년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표 2 OECD 주요 국가 혼외출산율-합계출산율 비교: 2020년

구분	한국	일본	호주	프랑스	독일	스웨덴	영국	미국
혼외출산율(%)	2.5	2.4	36.5	62.2	33.1	55.2	49.0	40.5
합계출산율(명)	0.84	1.33	1.59	1.79	1.53	1.66	1.56	1.64

출처: OECD,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재혼율은 어떠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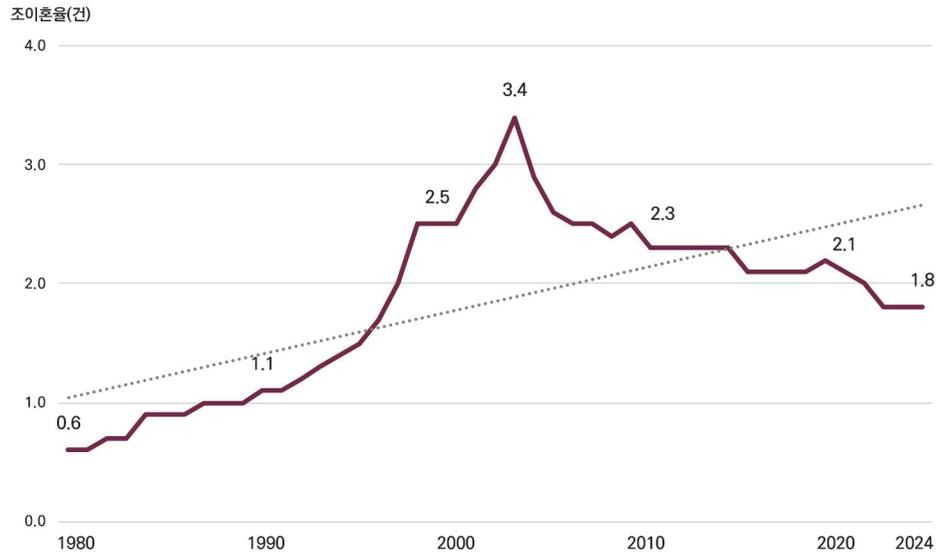
- 전체 혼인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게 변화 없음

• 이혼율 및 재혼율 추이

-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의미하는 조이혼율은 2003년 3.4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지속 감소하여 2024년 기준 1.8건 수준으로 낮아졌으나, 혼인율 감소 추세에 비하면 낮은 수준은 아님
- 당해연도 전체 혼인건수 중 재혼이 차지하는 비율인 재혼율은 2000년 이후 약 20% 내외수준에서 크게 변화 없음
- 만약 재혼율이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혼여성의 총 출생아 수는 초혼 및 재혼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sup>8)</sup>,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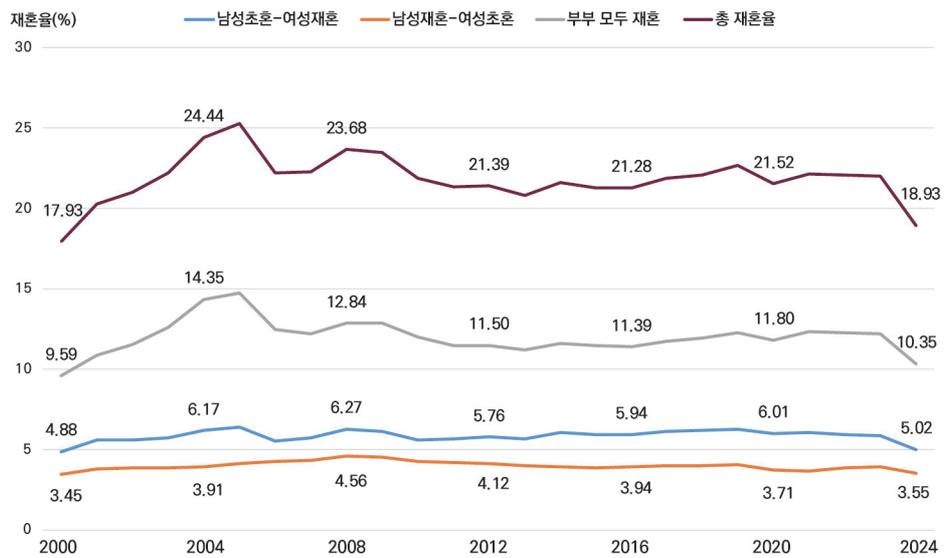
8) 변용찬, 김동희, & 이송희. (2010). 결혼 형태 변화와 출산율의 상관성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14** 조이혼율 추이: 1980-2024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이혼건수, 조이혼율」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그림 15** 재혼율 추이: 2000-2024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시군구별 혼인종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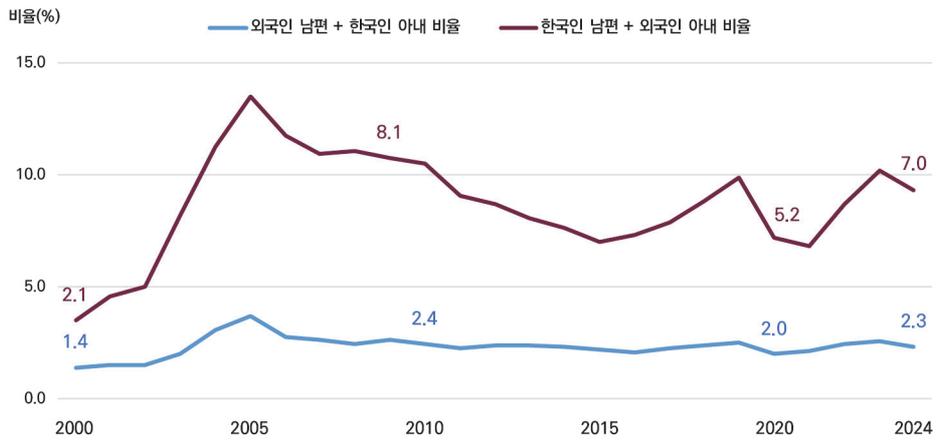
▶ 국제 혼인의 증가

- 국제결혼 비율 9.3%
- 이에 따라 다문화 가정 출생아 비율도 증가

• 우리나라 혼인 중 국제혼인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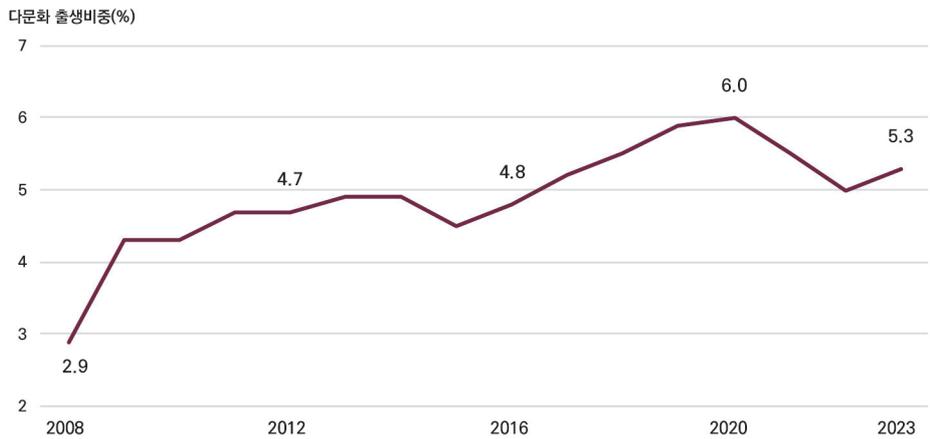
- 성사혼인 중 국제결혼의 비율은 2024년 기준 9.3%이며, 남성이 7.0%, 여성이 2.3%를 차지
- 전체 출생아 중 다문화 가정 출생아의 비중은 2008년 2.9%에서 2023년 5.3%로 증가

그림 16 외국인 대상 혼인을 추이: 2000-2024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혼인,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그림 17 다문화 가정 출생 관련 추이: 2008-2024년



출처: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다문화, 다문화 유형별 출생」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다문화 인구는 사회의 한 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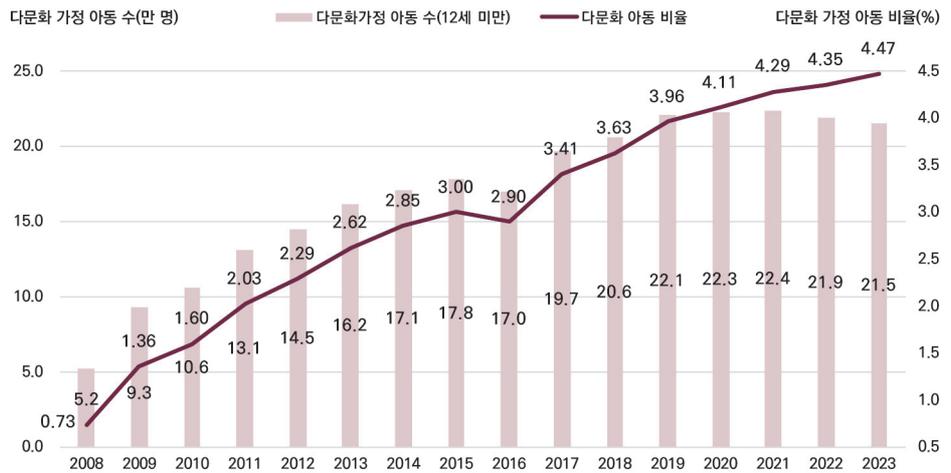
- 다문화 가정 아동 비율은 15년 전 0.7%에서 2023년 4.5%로 증가
- 그러나 다문화 가정 출생아 수는 감소 추세로, 인구구조를 변화시키기에는 역부족

• 다문화 가정 아동<sup>9)</sup> 비율의 증가

- 12세 이하 다문화 가정 아동의 수는 2021년 22만 4천 명을 기점으로 감소세에 들었으나, 전체 아동의 감소로 전체 아동 대비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율은 2008년 0.73%에서 2023년 4.47%로 지속 증가
- 다문화 가정 아동의 비율은 전국적으로 상승세로, 인천, 경기, 충남 등에서 두드러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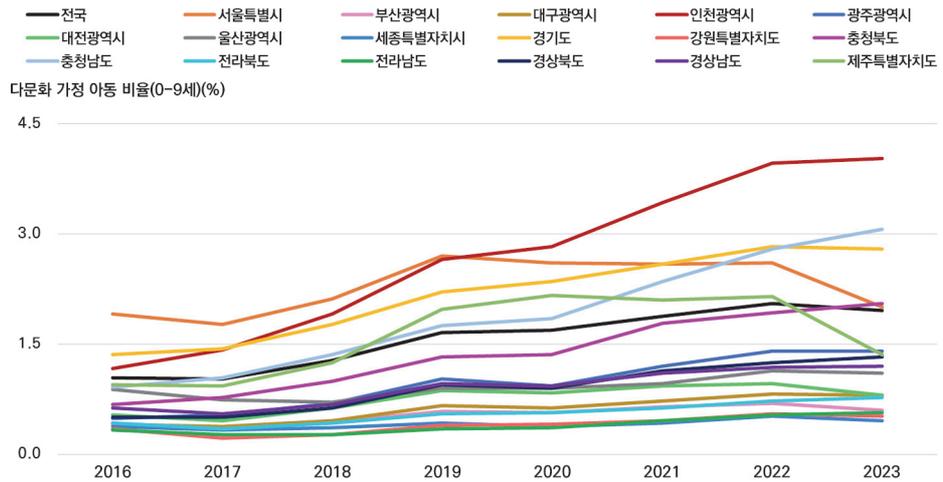
9) 본 보고서에서 '다문화 가정 아동'은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의 미성년 자녀 및 한국인과 결혼한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의 미성년자녀'를 뜻하며, 따라서 3개월 이상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부부의 자녀를 반영하지 않음에 유의

**그림 18** 다문화 가정 아동(12세 이하) 비율 추이: 2008-2023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2025),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관련 연도별 통계」(2024)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그림 19** 지역별 다문화 가정 아동(0-9세) 비율 추이: 2016-2023년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현황, 시군구별 연령별 외국인 주민현황」,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군구/성/연령(5세)별 주민등록연앙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3. 초고령사회, 인구구조 역전과 제도의 위기

#### 기대수명·건강수명 현황<sup>10)</sup>

- 국민 기대수명<sup>11)</sup> 추이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지속 상승 중이며, OECD 국가 중 가장 가파르게 증가한 국가
  - 2021년 기준 우리나라 기대수명은 83.6세로, 1981년 기준 66.7세 대비 약 17세 증가하였고,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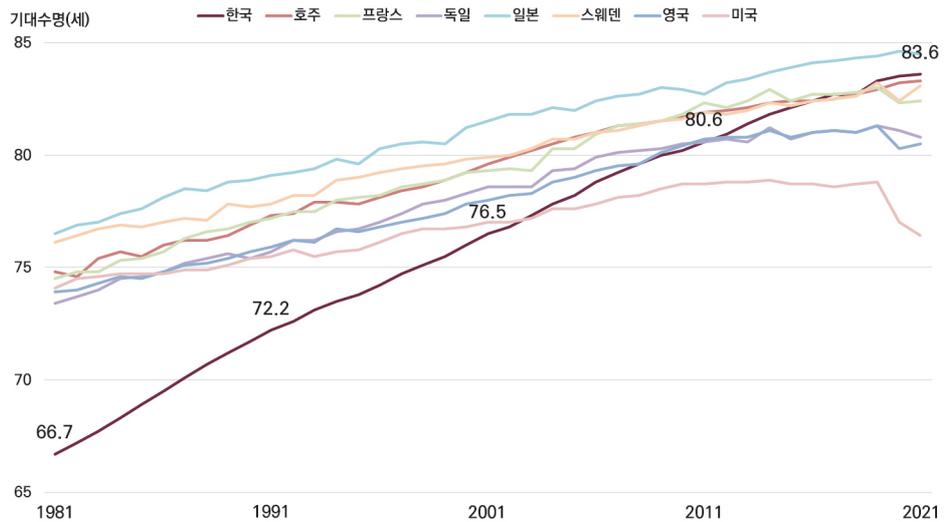
<sup>10)</sup>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의 경우, 국가에 따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년-2021년간 급감한 구간이 존재함에 유의

<sup>11)</sup> 기대수명: 출생아(연령 0세의 사람)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를 의미

▶ 우리나라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은 세계에서 가장 가파른 상승세

- 기대수명은 38년간 17세 증가한 83.6세
- 건강수명 또한 급상승하여 72.5세로, '건강한 노인' 증가
- 제도적 노인 기준은 여전히 65세
- 그러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과의 격차도 함께 벌어져, 보건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림 20 OECD 주요 국가 기대수명 추이: 1981-202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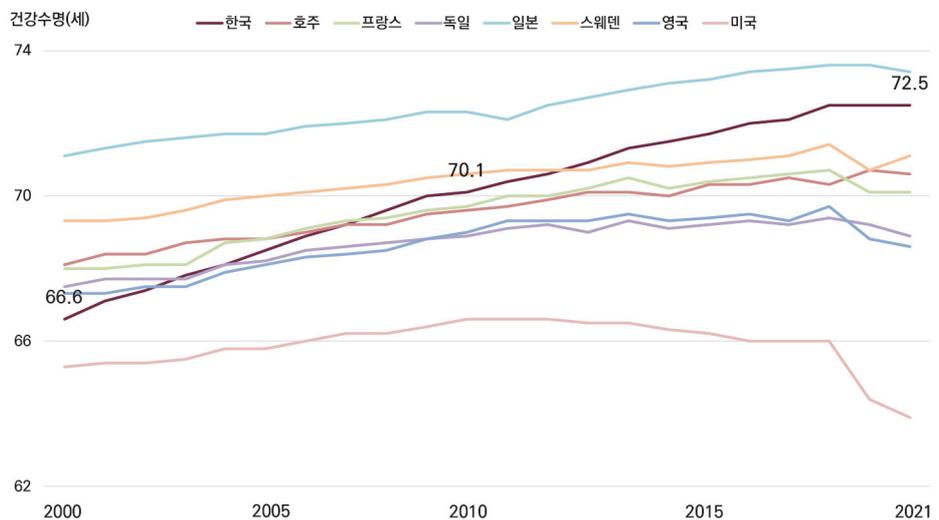


출처: OECD, 「OECD Life expectancy」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국민 건강수명<sup>12)</sup> 현황

- 2021년 기준 건강수명은 72.5세로, 2000년 66.6세 대비 약 6세 증가
- 2021년 세계 평균 건강수명 61.9세 대비 우리나라 국민 평균 건강수명은 약 10세 이상 상회

그림 21 OECD 주요 국가 건강수명 추이: 2000-2021년



출처: WHO,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Data by Country」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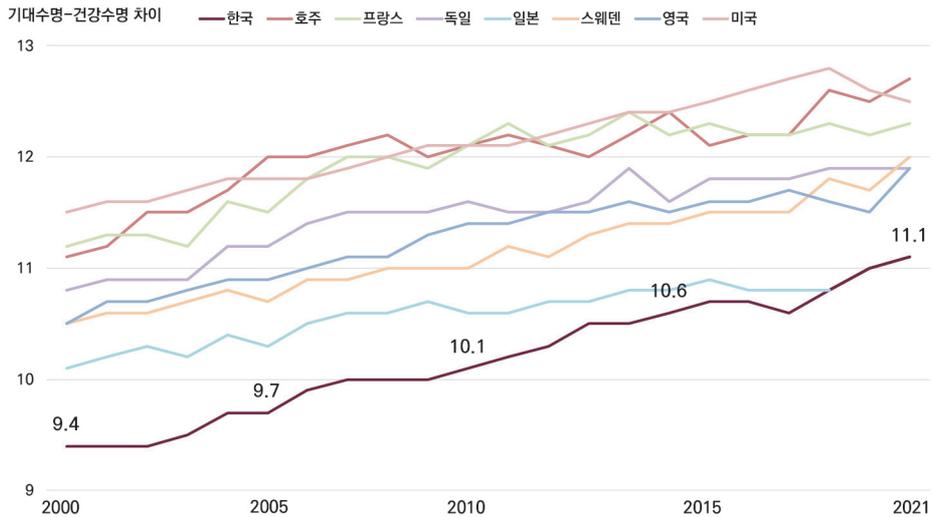
•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 국가비교

- 우리나라의 기대수명-건강수명 간 격차는 OECD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 가능함

12) 건강수명: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기간으로, '(기대수명) - (질병 혹은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의미

- 그러나 기대수명-건강수명 간 격차는 지속 증가 중으로, 이는 기대수명이 더 빨리 증가한 탓
- 격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노년의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령인구 비중의 급격한 증가를 고려할 때 보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음

**그림 22** OECD 주요국가 기대수명-건강수명 격차 추이: 2000-2021년



출처: WHO, 「Life Expectancy and Healthy Life Expectancy, Data by Country」 및 OECD, 「OECD Life expectancy」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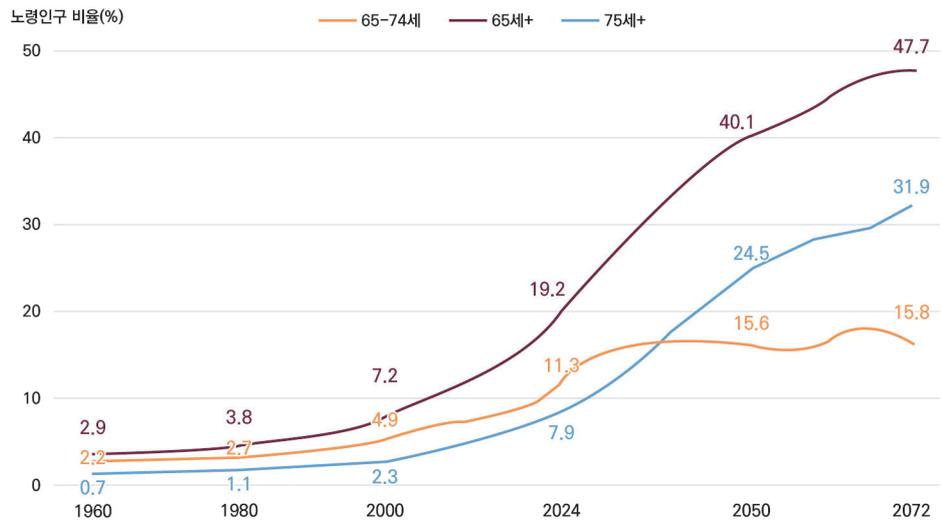
▶ **압도적인 고령사회**

- 2050년에는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65세 이상 인구
- 노령인구에 대한 부양부담은 15년 내 현재의 2배로 상승

🔴 **고령화 관련 지표 현황·예측**

- 노령인구 비율은 2024년 이후 더욱 가파른 상승 곡선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
- 2024년 기준 대한민국 노령인구 비율은 19.2%로, 1960년 2.9% 대비 약 16.3%p 상승
- 아직까지는 75세 이상 인구 비중(7.9%)이 65-74세 인구 비중(11.3%) 보다 낮으나, 2037년을 기점으로 추월할 것
- 207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절반 수준인 47.7%를 차지하고, 75세 이상 초고령인구가 그 중 67%를 차지하여, 전체 인구 대비 약 1/3 수준인 31.9%에 이를 것으로 예측

**그림 23 노령인구 비율 추이: 1960-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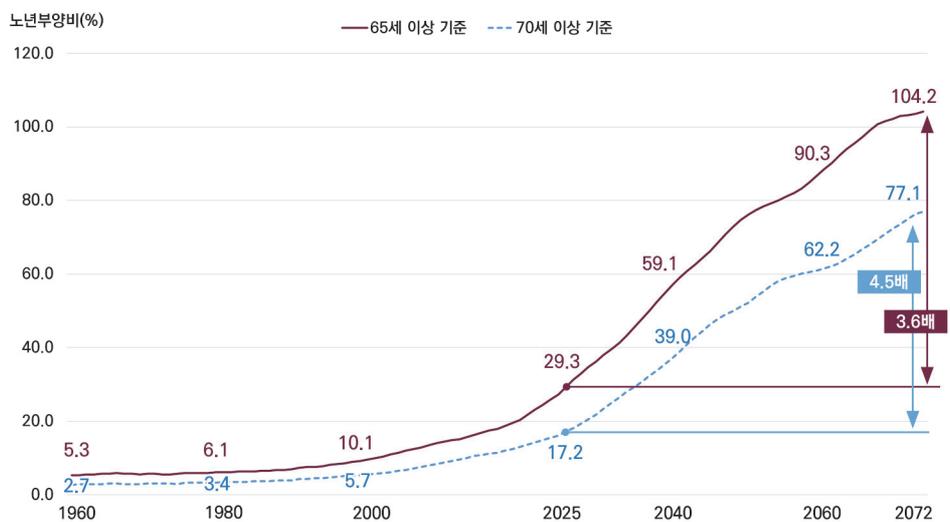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국, 성 및 연령별 추계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노년부양비 현황 및 예측

- 2025년 기준 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 (65세 이상)의 비율을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29.3명
- 현재로부터 15년 뒤인 2040년 노년부양비는 약 두 배인 59.1로 증가하고, 2072년에는 104.2로 현재의 3.6배에 해당하는 부양 부담을 가질 것으로 예측
- 실제 많은 노령인구가 노동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70세 이상을 부양 노령인구로 계산하더라도, 2025년 17.2에서 2072년에는 그 4.5배인 7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

**그림 24 기준별 노년부양비<sup>13)</sup> 추이: 1960-2072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 주요 인구지표」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13) 70세를 기준으로 설정한 노년부양비는 실질 생산연령인구를 15-69세로 상정하여, 15-69세 인구에 대한 70세 이상 인구의 비율을 산출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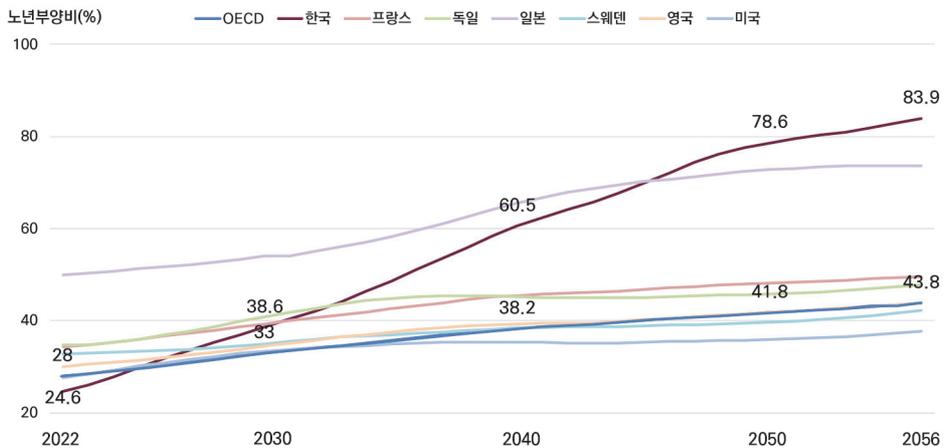
▶ 우리나라 노년부양비 증가 추이는 전세계 어느 국가에서도 본 적 없는 가파른 기울기

- 2056년 OECD 노년부양비 1위 예측
- 노령화지수 또한 급등
- 장기지속 부담으로 복지, 의료, 연금의 현재 구조로는 감당 불가

➤ OECD 주요 국가 노년부양비 비교

-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곧(2026년) OECD 평균을 추월할 것
  -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24.6으로 OECD 평균 28.0에 못 미치며, 일본의 49.9에 비해서는 절반 수준밖에 되지 않음
  - 그러나 2056년 우리나라 노년부양비는 83.9로 OECD 회원국 중 1위, OECD 평균(43.8)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며, 이미 초고령 국가에 속하는 일본(73.6)에 비해서도 10 이상 높을 것으로 예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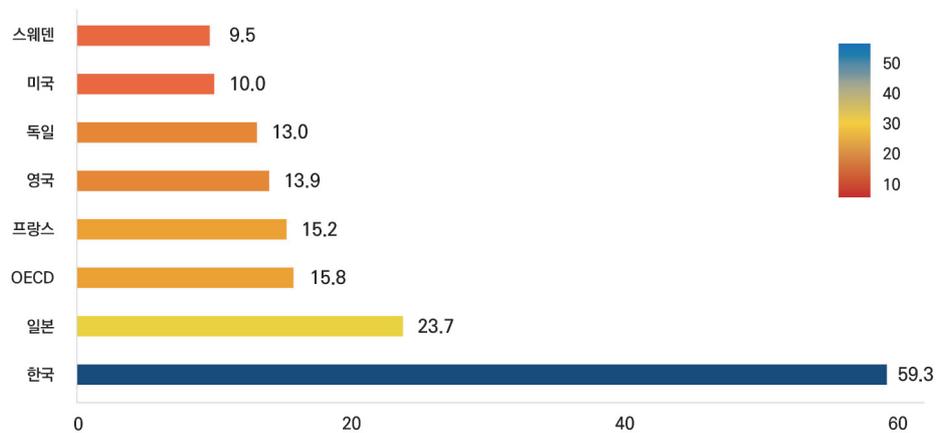
그림 25 OECD 주요 국가 노년부양비 예측 추이 비교: 2022-2056년



출처: OECD, 「OECD Data Explorer」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노년부양비 증가분(2022 vs. 2056)
  - OECD 국가들의 2022년 대비 2056년 노년부양비 증가분은 평균 15.8명인데 반해, 한국은 그 4배 수준인 59.3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어느 국가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던 급격한 변화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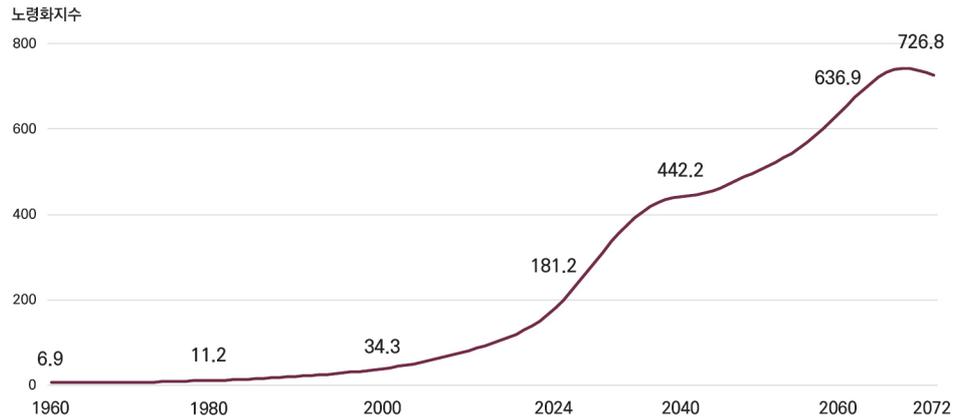
그림 26 OECD 주요 국가 노년부양비 증가 추이 예측: 2022-2056년



출처: OECD, 「OECD Pension at glance, Old-age dependency ratio」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노령화지수의 현황 및 예측
  - 15세 미만 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인 노령화지수는 2024년 기준 181.2로, 2040년에는 504.0, 2072년에는 726.8로 지속 상승할 것으로 예측
  - 저출생으로 인한 유소년 인구 감소는 노령화지수 증가율을 가속화

그림 27 노령화지수 추이: 1960-2072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시도, 주요 인구지표」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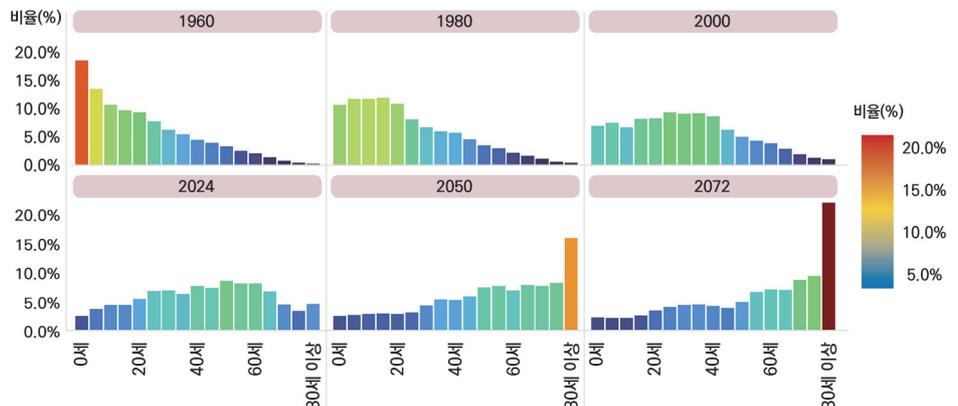
▶ 역피라미드 형태로 급격한 인구구조 전환

- 2050년에는 80대 이상 인구가 15% 이상, 2072년에는 20% 이상
- OECD 주요국가 대비 매우 고령화된 인구구조

➤ 연령대별 인구구조의 변화

- 고령인구의 증가, 생산연령인구의 감소
  - 2024년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
  - 1960년대에는 고연령층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드는 피라미드 구조가 뚜렷했으나, 종형, 항아리형을 거쳐 2050년에는 인구구조가 완전히 역전된 뚜렷한 역피라미드형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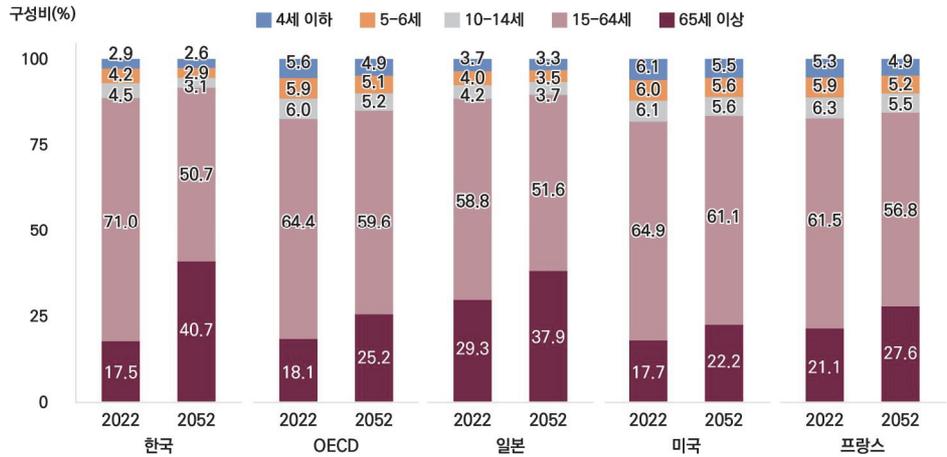
그림 28 연령대별 인구구조 시점별 비교: 1960년 - 2072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전국, 주요 연령계층별 추계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OECD 주요국가 연령대별 인구구조 비교
  -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7.5%로, OECD 평균 18.1%보다 낮은 수치임 (단, 2052년 기준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0%)
  -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가 매우 급격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2052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 비율은 40.7%로 OECD 평균인 25.2%보다 약 15%p 높을 것으로 전망

그림 29 OECD 연령대별 인구구조 비교: 2022년 vs. 2052년



출처: OECD, 「Demographic Change in Regions and Cities」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4. 개인 생애주기의 전반적인 지연

▶ 20여 년 전과 비교할 때, 개인의 평균적인 생애주기는 전반적으로 지연

- 결혼, 취업, 출산 시기는 늦어져, 재생산 가능한 기간 축소
- 반면, 주된 일자리 퇴직 시기는 다소 빨라지고 사망 시기는 늦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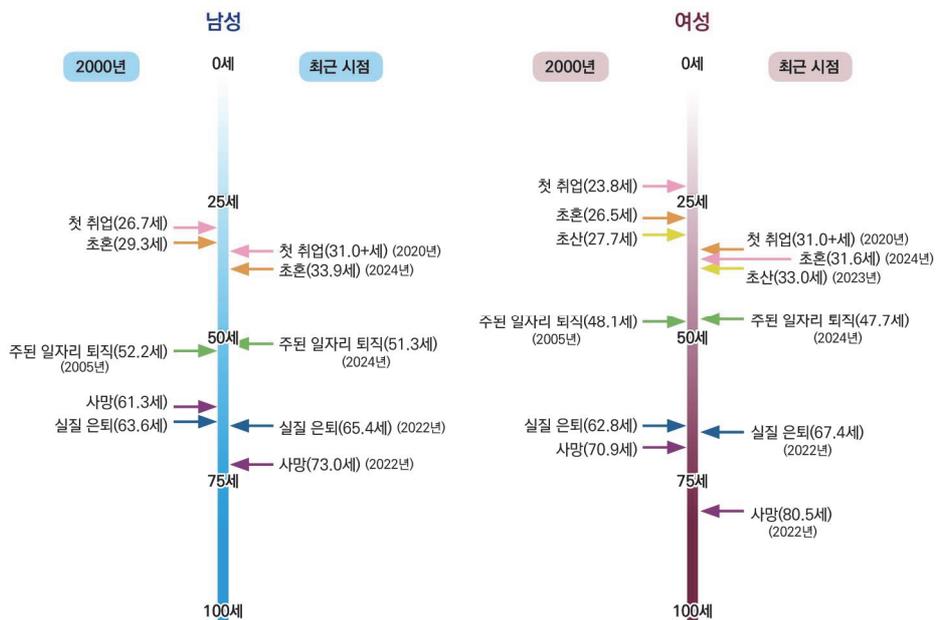
#### 🔍 생애주기의 지연

- 생애주기가 전반적으로 늦어지는 경향
  - 자료에 따라 가용한 최신 통계 산출 시점이 상이하기는 하나, 2000년과 가능한 최근 시점의 주요 생애 이벤트 발생 연령을 비교하면, 결혼, 취업, 출산, 실질 은퇴,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이 지연
  - 특히 취업, 초혼, 평균 사망연령 등이 두드러지게 지연됨
- 주된 일자리에서의 노동 생애주기는 축소되었으나, 더 오랜 기간 노동시장에 머무름
  -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 남성 4.3세 지연, 여성은 7.2세 지연 (남성 26.7세→31.0세, 여성 23.8세→31.0세)되었음에도, 2000년 대비 2024년 주된 일자리(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다소 앞당겨져(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 주된 일자리에서의 노동 생애주기는 축소
  - 실질 은퇴(노동시장을 이탈한) 연령은 2000년 대비 2022년 남성 1.8세 (63.6세→65.4세), 여성 4.6세(62.8세→67.4세) 지연되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존 기간은 길어짐

- 은퇴 이후의 삶이 연장된 데 따른 제도적·재정적 위험 증가

- 인구 재생산 생애주기, 가임기간의 축소
  - 2000년 대비 최근 연도 비교 시 초혼연령의 지연(남성 2000년 29.3세→2024년 33.9세, 여성 2000년 26.5세→2024년 31.6세) 및 초산연령 지연(2000년 27.7세→2023년 33.0세)으로 가임기간, 즉 재생산이 가능한 생애주기가 축소(15-49세를 가임기간으로 볼 때, 약 21년→16년으로 축소)
- 은퇴 이후 삶의 연장
  - 2000년 대비 2022년 평균 사망 연령의 비약적인 상승(남성 61.3세→73.0세, 여성 70.9세→80.5세)으로, 주된 일자리 퇴직은 물론 실질 은퇴부터 사망까지의 기간이 크게 길어짐(남성 △2.3년<sup>14</sup>)→7.6년, 여성 8.1년→13.1년)
  - 임금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공적연금 등 이전소득의 부재는 심각한 장기 빈곤으로 이어질 가능성
  - 현재 65세 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보건, 복지, 연금 등의 제도 설정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

그림 30 성별 주요 생애 이벤트 발생 연령 비교: 2000년 vs. 최근 시점



출처: 인크루트(2024) 「2024 대한민국 신입사원」(첫 취업: 2000년, 2020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평균초혼연령」(초혼: 2000년, 2024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첫째아 모의 평균 출산 연령」(초산: 2000년, 2023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주된 일자리 퇴직: 2005년, 2024년)  
 OECD, 「Pensions at a Glance, effective age of labour market exit」(실질 은퇴: 2000년, 2022년)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연령별 사망자수」(사망: 2000년, 2022년)  
 주1: 2000년과 최근 시점에 각 생애 이벤트가 발생하는 평균 연령을 표기한 것으로, 인구 코호트에 따른 생애주기는 고려되지 않음

14) 평균 사망연령은 남성 전체인구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사망자의 평균연령을 산출, 실질 은퇴 연령은 고령층 부가조사에 응답한 고령자들만을 대상으로 조사함에 따라 남성의 은퇴부터 사망까지 기간이 음수로 나타남에 유의

주2: 자료의 한계로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2005년, 2020년 값을 표기하였으며, 최근 시점은 가용한 범위에서 가장 최근의 자료를 활용하여 값을 표기함

주3: OECD에서 산출하는 '실질 은퇴연령(effective age of labour market exit)'은 '당해년도 40세 이상 노동자의 평균 노동시장 이탈 연령'을 의미하며, 40-79세의 각 연령 코호트에서 발생한 모든 노동력 이탈 비중을 가중하여 더한 값임

## 5.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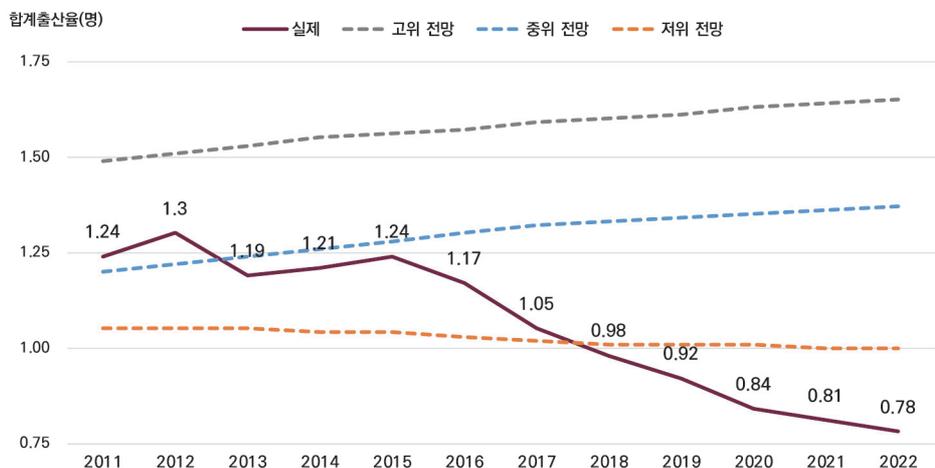
### ▶ 예측보다 빠른 인구절벽

- 혼인 수의 급락, 혼인 지연 및 출산율 급감, 팬데믹 효과 등은 예측하지 못한 부분
- 앞으로 5-10년이 골든타임

### 🔴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관련 문제점

- 인구절벽의 심화
  - 최근 10년간 출생아 수 1/2로 급감(2010년 47만 명에서 2024년 23.8만 명으로 감소)
  - 2024년 합계출산율 0.75명으로 세계 유일의 0명대 출산율,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 (2.1명)의 1/3 수준
- 혼인·출산 지연 및 감소
  - 조혼인율은 1980년 10.6건, 1990년 9.3건에서 2024년 4.4건으로 급락
  -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며, 초산연령도 이와 함께 상승
  - 가임가능기간 단축, 출산 감소 추이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
- 과거 합계출산율 예측치와 실제 합계출산율 관측치 비교: 예상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합계출산율
  - 2010년 당시 예측한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예측치는 1.37명
  - 실제 2022년 합계출산율 관측치는 0.78명으로 예측에 비해 약 절반 수준임
  - 2010년 이후 지속 증가를 예측한 추이와는 다르게, 2011~2012년은 인구추계 중위에서 고위 사이 수준, 2013~2015년은 인구추계 중위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15년 이후 급락

그림 31 과거(2010년 기준) 합계출산율 예측치 - 실제 합계출산율 관측치 비교: 2011-2022년



출처: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 및 「장래인구추계: 2010~2060 보도자료」(2011)를 이용하여 재구성

-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현상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 조합의 가능성 존재
  - 지속적인 혼인율 감소, 초혼 연령 증가, 그에 따른 가임기간 감소
  - 커리어의 중요성 증대, 혼인 및 출산에 대한 인식 변화,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 교육비, 주거비 상승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등
  - 선진국에 진입함에 따라 가족 내 자원 배분을 더욱 고려하게 되고 사회보장 제도 또한 발전이 예상됨에 따라 자녀 출산의 효용이 감소할 가능성<sup>15)</sup>도 존재
- 최근의 혼인율 증가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의 자녀인 에코붐 세대(1991-1996년생)가 결혼 적령기에 진입한 영향이 일부 존재
  - 2024년 혼인건수는 22.2만 건(전년 대비 14.4% 증가)으로,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
  - 에코붐 세대의 연간 출생아 수는 평균 71.4만 명씩, 6년간 총 약 428만 명에 달함
  - 앞으로 5~10년간이 출생아 수 반등의 골든타임

표 3 혼인건수 추이: 2019-2024년

(단위: 만 건)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혼인건수	23.9	21.4	19.3	19.2	19.4	22.2

출처: 통계청, 「인구총조사, 연령별/성별/혼인상태별 인구(각년도)」 자료를 이용하여 재작성

- 결혼하고도 출산하지 않는 부부 증가
  - 최근 30년간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출생아 수 감소에는 결혼한 여성 비율의 하락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침<sup>16)</sup>
  - 유배우 출산율(결혼한 여성의 출산율)은 2005년에서 2010년대 중반까지 1.5명 내외를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부터 하락이 두드러졌으며(2015년 1.50→2020년 1.13), 이것이 2010년대 중반 이후의 출생아 수 감소의 주된 요인 중 하나임<sup>17)</sup>
  - 결혼한 부부의 출산 감소 추이는 신혼부부<sup>18)</sup>를 대상으로 한 통계에서도 나타나는데,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신혼부부 중 무자녀 비중은 2015년 33.3%에서 2023년 43.62%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

15) Becker, G. S., & Barro, R. J. (1988). A reformulation of the economic theory of fertility.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3(1), 1-25.

16) 이철희. (2023). 1992년~2021년 한국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해: 여성인구, 결혼,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46(3), 79-110.

17) 이철희. (2023). 1992년~2021년 한국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해: 여성인구, 결혼, 자녀수별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46(3), 79-110.; 계봉오, 유삼현, 최슬기. (2022). 유배우 출산율 변화, 2005~2020: 혼인지속 기간 접근. 한국인구학, 45(4), 71-92.

18) '신혼부부'는 '통계작성 기준일 현재 혼인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부'를 의미함. 따라서 각 연도의 값은 직전년도 값의 최근 4년치와 중복되며, 혼인신고 직후 5년간의 정보만을 포함함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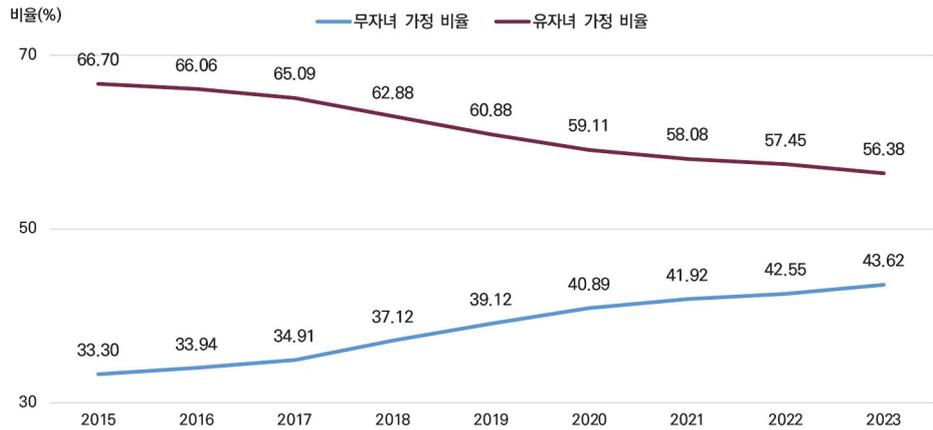
**표 4 유배우 합계출산율 추이: 2005-2020년**

구분	2005	2010	2015	2020
유배우 합계출산율 추정치	1.41	1.55	1.50	1.13

출처: 계봉오, 유삼현, & 최슬기. (2022). p.88.

주: 위의 유배우 합계출산율은 20세 이상 49세 이하 여성의 혼인 지속 기간별 출산율의 합으로 산출한 '기간기반 유배우 합계출산율(Duration-based total marital fertility rate)'을 의미함

**그림 32 신혼부부 중 무자녀 및 유자녀 비중 추이: 2015-2023년**



출처: 통계청, 「신혼부부통계, 신혼부부 특성별 출산자녀수별 신혼부부 수」 자료를 이용하여 재구성

▶ 준비 이전에 다가오는 위협

🔴 **초고령사회 도래의 가속화 관련 문제점**

- 고령인구의 급속한 증가
  -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중은 2024년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
  - ‘건강한’ 고령층(2021년 건강수명 72.5세)의 증가, 그러나 해당 계층의 활용 논의는 부족한 상황
  - 특히, 新노년층(최근 고령층으로 진입한 베이비부머 세대)은 기존 노인층에 비해 학력 수준이 높고, 자산 규모가 크며, 건강이 양호하여 소비 및 생산의 핵심 주체로 부상
- 생산연령인구 감소, 부양부담의 급증
  - 노년부양비는 2025년 29.3명에서 2040년 59.1명(2배), 2072년 104.2명(3.6배)까지 급등
  - 기대수명-건강수명 간 격차는 2000년 9.4년에서 2021년 11.1년으로 지속 증가 추세
  - 사회경제적 활력 저하 및 재정 부담 심화 불가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확대로 의료비 증가, 연금 수급인구 비중 증가로 연금 지급액 증가, 이로 인한 후세대 부담 가중 등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 필요

## ▶ 멈출 수 없는 흐름

## ➤ 인구감소는 멈출 수 없는 흐름

- 인구구조 불균형의 심각성
  - 출산율 하락 +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구구조의 불균형 심화
  - 이미 진행되고 있는 출생아 수 감소로 인구 자체가 해마다 줄어드는 구조로 고착화
- 절대적인 가임기 여성 수의 감소로, 합계출산율이 소폭 상승하더라도 출생아 수 증가는 제한적
- 혼외출산 비중이 절대적으로 낮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혼인 건수 하락은 곧 출생아 수 감소와 직결
- 유배우 출산율 또한 2015년 이후 급락하며 출생아 수 감소 추세 진행
- 국제혼인 및 다문화 출생 비율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추세 변화에는 한계
- 단순한 출산장려 정책으로는 인구구조가 가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

## 6. 해결 불가능한 구조가 아닌, 시급한 정책 전환이 필요한 구조

## ➤ 정책적 시사점

- 인구감소 대응을 미래의 문제가 아닌 현재의 위기로 인식하고 즉각적이고 과감한 정책 전환이 필요
- 출산의향 확대를 위해서는 경제적, 제도적, 문화적 요인을 고려한 통합적 접근 필요하며, 사회문화적 변화에 발맞춘 혼인·가족 제도의 유연한 개편이 병행되어야 함
  - 경제적 불확실성 해소: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출산의향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으므로<sup>19)</sup>, 사회 전반적인 소득 수준 제고, 일자리 안정 등 경제적 안정 기반 조성 및 성장 전략 필요
  -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는 종합 정책 패키지 마련: 육아휴직제도 등 일·가정 양립 정책의 적극적 확보와 직접적 양육비 지원 및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 장기적 가족수당 제도 등 종합 정책 패키지가 필수적<sup>20)</sup>
  - 성평등 인식 개선 및 남성 돌봄 참여유도가 결정적: 전통적인 성역할 인식을 가진 경우 출산에 긍정적인 반면, 성평등 의식이 강한 경우 사회 전반의 성역할 분담 정도에 따라 출산의향이 달라지기에<sup>21)</sup>, 국가 차원의 성평등 교육, 가사노동 및 육아 분담에 대한 인식 개선, 남성 육아휴직 사용확대 등 제도적 유인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필요

19) Morgan, S. P., & Taylor, M. G. (2006). Low Fertility at the Turn of the Twenty-First Century. *Annual Review of Sociology*, 32, 375-399.

20) Guetto, R., Alderotti, G., & Vignoli, D. (2025). Can Family Policies Enhance Fertility?: An Ex Ante Evaluation Through Factorial Survey Experiments. *Demography*, 62(1), 311-334.

21)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 혼인·출산·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와 사회문화적 전환에 발맞춰 1인가구, 비혼 동거, 비혼 출산, 재구성 가족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유연화할 필요
-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복지체계의 근본적 개편 필요
  - 연금, 의료 등 복지체계 전반에 걸친 복지비용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감당하기 위한 제도 전반의 구조적 개편이 시급
-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한 노동시장 재편 및 생산성 제고 전략 마련
  - 중고령 노동자 활용을 위한 주된 일자리에서의 지속 고용 유도, 양질의 비정규직 일자리 마련 등 중고령 일자리 정책의 재설계 필요
  - 경력단절 등 구조적 문제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최소화 및 여성 노동시장 재진입 지원 확대
  - 이민자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통한 노동공급 확충 방안 수립 필요